

가중되는 개방압력

國內通信시장의
개방과 對應방향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분야가 선도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일국의 국가경제 발전의 열쇠를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관련 산업은 그 자체 산업의 발전경향이 세계 공통적으로 규제완화, 디지털화,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이 분야에 있어 강력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선진국 특히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통신 등 서비스분야에서 타국의 시장개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통신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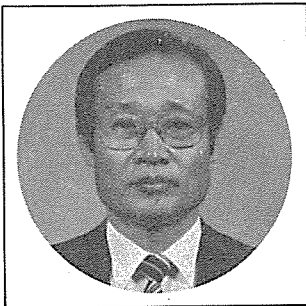
즉, 미국은 지난해 8월에 발효된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LAW)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한국과 EC국을 지정하고, 통신시장을 즉각 개방하지 않으면 동법 301조에 의하여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개방압력에 대하여 그 범위나 시기, 방법등을 놓고 미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국내 통신사업 현황

이러한 개방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먼저 우리나라의 통신산업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신산업은 통신사업, 통신관련 기기 제조업 그리고 통신공사사업 등과 같은 통신관



李 龍 兪
〈情報文化센터 會長〉

런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는 통신산업발전의 최종결과로 나타나는 통신사업에 대하여 기본통신사업분야와 고도통신사업분야로 나누어 국내 통신사업의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한다.

기본통신 사업분야

기본통신사업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입전화의 경우 1982년 이래 연간 100만회선 이상씩 대량공급을 해온 결과 1987년말에는 1,000만회선을 돌파하고 1992년에 가서는 가입전화시설이 1,491만회선이 되어 100인당 가입자는 28.4명, 전화기 보급율은 42대에 이르러 선진국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경우 전화교환망, TLX망 외에 DATA전송을 전용으로 하는 PACKET교환방식을 이용한 공중정보통신망(DACOM-NET)이 1983년 DACOM에 의해 개통되어 국내 26개 ACCESS POINT와 외국 52개국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1988년 현재까지 가입자는 3,348 가입자로서 연평균 100% 이상 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는 규모면에서 프랑스의 1/30, 일본의 1/12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즉, 한국의 기본통신사업의 경우 그중 전화, 텔렉스등은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는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도통신 사업분야

더우기 고도통신사업 분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유치단계를 면치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 외에도 100여개의 정보통신 역무제공자가 체신부의 허가를 받아 DP 및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컴퓨터파워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센터로써 DB나 인포메이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고도통신

서비스는 DIALOG등 해외정보은행서비스, NOTICE, DIALCOM등 해외 E-MAIL서비스, 연합통신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REUTER MONIDOR 서비스, AP-TELERATE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나 아직 이용자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한국데이터통신<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1987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한글전자 사서함과 천리안 정보은행서비스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1988년말 현재 가입자 수가 각각 660, 1,185명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발전의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포항제철과 거래선들을 연결하는 STEEL VAN, 숙박업체, 교통업체, 공연장등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기관과 여행사 판매창구를 연결하는 관광예약시스템, 신용카드를 조회하는 신용카드시스템, 한국여행정보<주>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여행정보 시스템<KO-TIS> 등이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볼때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개방압력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신시장 진출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기기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수출로 시작되었으나 1984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화기등 H/W부문의 대미수출이 급증하여 통신기기부문 전체로 볼때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우리나라가 신흥공업국의 하나로 향후 통신 SVC시장의 잠재성이 높은 점등에서 한국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는 크게 2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통신기자재를 한국에 파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장벽이 많으니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 둘째, 우리나라 VAN사업을 개방하라는 두가지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첫째 문제 즉, 통신기기부문의 미국측

요구사항은 한국의 하드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볼 때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도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며 정부의 입장도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용할 예정인바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생략한다.

문제는 두번째 요구사항 즉, VAN 사업의 개방이다.

미국은 국내 VAN시장을 1990년까지 개방되 NTNS(NON-RESERVED TELECOMMUNICATIONS NETWORK-BASED SERVI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의 독점서비스를 고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NTNS로 간주하여 개방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생각하는 독점서비스는 공중용전신, 전화교환서비스와 전기통신망 기간설비의 소유, 운영 및 통제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인 VAN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 1월까지 한국과 외국간에 제공되는 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NTNS를 개방할 것, NTNS사업 활동상의 제약(예를 들면 CPE접속, 망간상호접속, TDF 등에 있어서의 제약등)을 철폐할 것, DB/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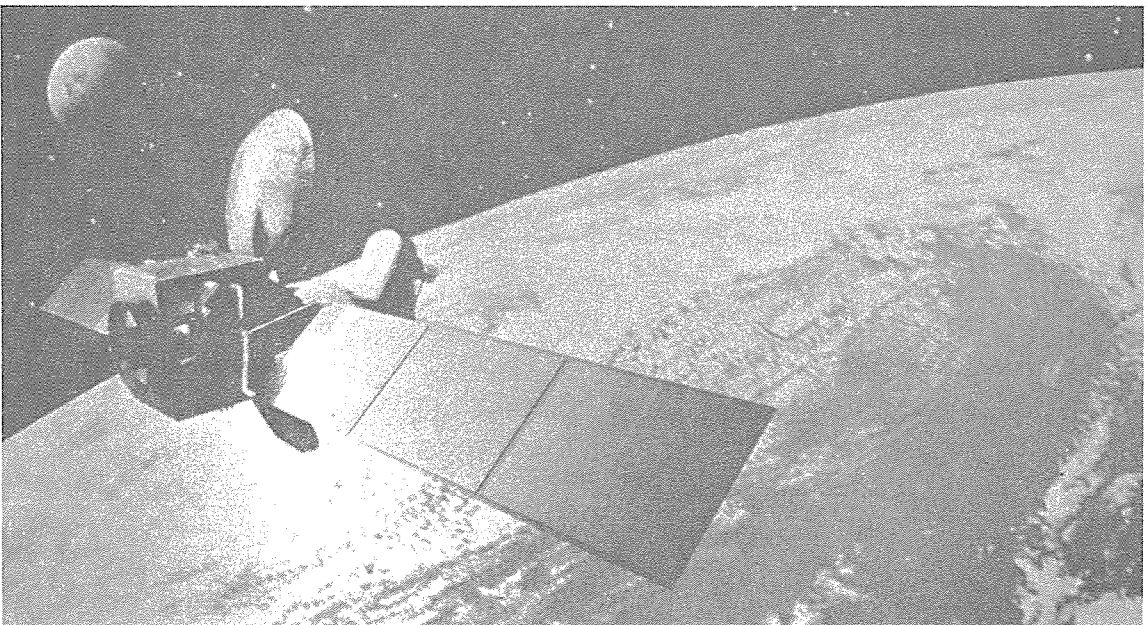
를 포함한 모든 NTNS의 면허등록등을 철폐할 것, 상호접속 및 서비스대상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할 것, 1990. 1. 1까지 독점업체(KTA, DACOM)의 요금산정을 원가에 기초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의 비합리적 SURCHARGE를 폐지할 것, 1990. 7. 1까지 독점사업자의 반경쟁적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분리를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한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 및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미국정부와 협의할 것, 1991. 1. 1까지 모든 NTNS에의 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할 것 등이다.

상기와 같은 미국의 요구사항은 그 내용 및 시기에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한국이 그 대로 수용하기에는 곤란한 정도인바 이에 대한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독자적인 적극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향

개방에 따른 문제점

VAN사업은 정보의 고속도로인 동시에 정보의 생산, 가공, 보관, 유통 등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간적인 INFRASTRUCTURE이며 고도 성장의 전락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VAN사업은 아직도 태동기에 불과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VAN시장의 개방요구사항은 그 범위 및 시기에 있어서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현단계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전면 개방한다면 원래 독점성이 강한 통신사업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의 몇몇 기업에 의한 자연적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자생력 저해는 물론 나아가서는 정보종속화에 따른 통신주권의 위협, 국가안보상의 취약가능성, 문화적 주체성의 상실가능성, 금융등 통신에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대외종속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은 전기나 전화와 같은 사회의 기초시설로써 수지가 안맞아도 시골의 산간벽지나 외딴 섬 같은 낙후지역에도 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도시에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에 너무 일찍 문호를 개방하면 한국의 통신사업자는 이들과 경쟁하느라고 낙후지역에 시설을 할 여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아 균형있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통신시장의 개방은 국가내의 지역 격차는 물론 국가간의 격차도 더욱 심화시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도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방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은 그 나라의 산업수준, 소비자 요구사항등 다각적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것이 국가이익이나 국민편익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여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응 방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만족시킴으로써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이와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국내통신사업자를 적극 육성하여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기존 공중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VAN사업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시기의 국내개방등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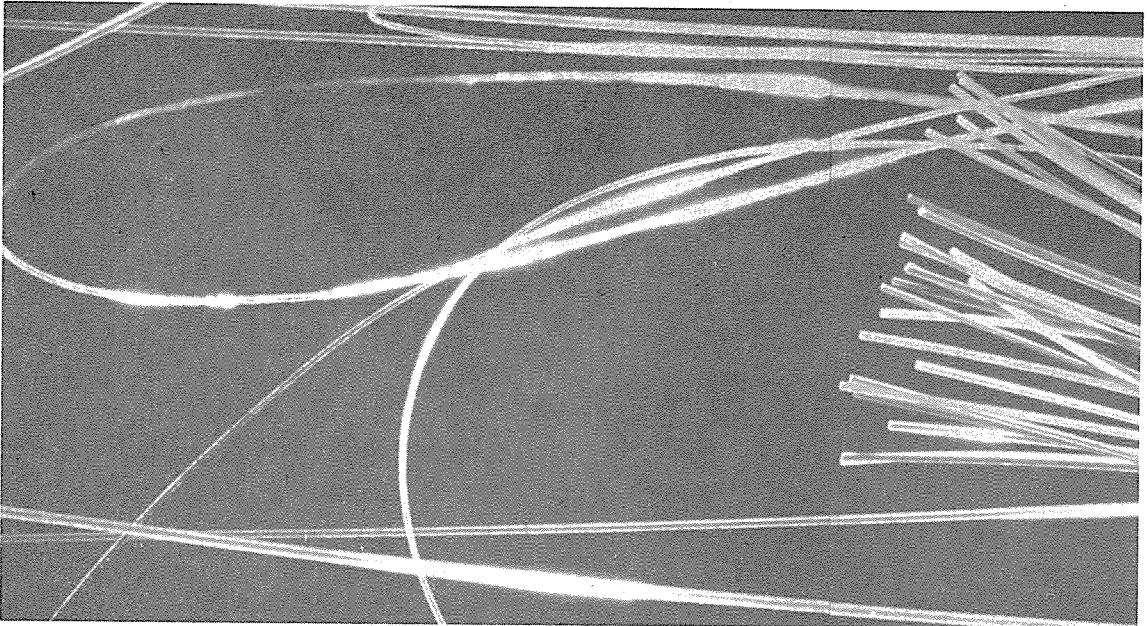
또한 국내통신사업자의 기존 망간연동의 조속실현 및 국가 표준단말기의 대량보급을 통해 공중통신사업자에 의한 민간에의 데이터서비스 공급능력을 확대시켜 미국 VAN사업자의 진출 분야를 기업부문의 특수수요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DB, DP의 경우도 정보의 대외 종속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적극 육성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등이 공동 또는 독자의 노력으로 국가기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제도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VAN사업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관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VAN사업은 각국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그 범위도 상이한 바, 우리의 경우도 우리 실정에 맞는 VAN사업의 범위를 되도록 한정적으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 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술의 진전에 의해 그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상품의 수입개방정책에 있어서 물품별 수입자유화 일정이 다르듯이 VAN사업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동시에 개방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한 구체적 서비스를 열거하고 기본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것과 고도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세분화하여 전자에 대하여



는 개방일정을 늦추고 후자는 다소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TDF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선진국은 여타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바, 이들 국가는 대체로 TDF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우는 TDF를 상당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주권, 국가안보, 문화적 주체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DB, DP의 전면자유화 및 VAS의 제한적 자유화라는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특히 국제 특종통신회선 사용상의 외국기업체(통신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의 요구 사항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는 불가능한 것이나 주요산업, 기술정보 및 국가정보등은 국내에서 처리가 되도록 우리의 입장에 맞는 가장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과거 산업혁명의 물결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끼지 못한 우리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 물결에는 현명하게 대응해 21세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개방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창의력, 활력과 외국의 선진기술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책이나 대응방안이 없이 개방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지를 모아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이 국가이익과 국민편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